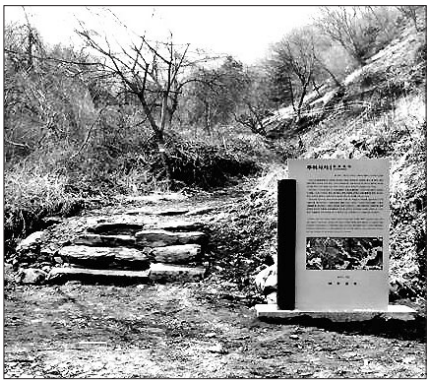


“천주강학 톱다 스님들 수난사 복원·기려야... 제2천진암 안돼”

조계종 제2교구신도회, 6일 주여사지 복원 발원 기도

조계종 제2교구 신도회가 7월 6일 오후 2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에 소재한 주여사 절터의 원형복원을 발원하는 기도입재를 거행한다.



여주 주여사지 전경. 카톨릭 도래 성지로 변화될 지경에 있다.

주여사는 조선 후기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천주교 자료들을 공부하던 권철신 등이 1779년 주여사와 인근 천진암을 오가며 천주강학을 진행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과 이를 보듬고 지켜 주던 스님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조선 말 폐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천진암 성지 과정서 비석 유출

여주 시청엔 부도... 반환돼야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신도회는 “천주교 측이 천진암을 성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천주교 성당으로 옮긴 주여사 해운당 대사 의지 스님비와 여주시청에 보관돼 있는 부도탑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회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복원해 신유박해 때 천주학자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불제자들의 억울함을 해원하는 동시에 부처님의 숭고한 자비심이 현재와 후대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사에 얽힌 역사를 다시 복원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기도입재를 시작으로 종단 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원형복원을 위한 마음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내은 기자

‘규제’ 新법인법, 일선 법인 호응 얻을까

[해설]조계종 중앙총회 제198차 임시회가 남긴 것

법인법 대체입법인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일부 조문이 수정된 후 가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향적)는 6월 25일 열린 제198차 임시회에서 이 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인법은 폐기되고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이 대체된다.

법인관리법의 기존 법인법과 차이점은 법인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했다는 것이다. 법인 종류를 종단이 출자한 종단법인, 사찰을 보유한 사찰보유법인, 사찰 자체가 법인인 사찰법인, 사찰이 재산을 출연한 사찰출연법인, 복수의 사찰이 출연한 사찰공동출연법인, 승려 개인이 출연한 승려법인 등 세부적으로 나눴다. 종합학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규제 조항 중 하나로 꼽혔던 정관 변경 종단 승인은 법인 명칭, 임원 자격과 선출, 정관 개정 정족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으로 별도의 세부항을 만들어 이전 법인법과는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법인관리법에 내재된 규제 요소들은 여전히 있다.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에 사찰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까지 신설했다. 이는 법인으로의 사찰 등록 차단하고 사찰이 곧 법인인 ‘사찰 법인’의 난립을 막아 종단 재산 유출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찰이 발전해 포교·재정 역량이 커지는 것을 막는 규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존의 사찰 법

인, 사찰 보유 법인들도 법인 산하 사찰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들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고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선학원과 별다른 대화 없이 만든 완화 조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인관리법은 선학원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은 조계종 승려로, 이사 1/4 이상을 총무원장의 복수 추천에 의한 이사회 선출로 규정했다. 분명 이전 법인법과는 눈에 띄는



조계종 중앙총회는 6월 25일 제198차 임시회를 열고 종헌, 종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법인관리법, 확산없이 수정 가결

규제 요소 여전... 효과는 미지수

선학원과 같은 더욱 첨예해질 듯

원장 선거인단 확대 종헌 이월

진정성 보여야... 떠넘기기 안돼

‘만장일치’ 관행 논란 숙고해 봐야

완화책이지만 법인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선학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은 선학원과 정 정 선포 수준의 으뜸장을 봤다.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총회에서 “6월 30일까지 선학원 정관을 원상복귀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보냈고,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되고 대화 시도를 계속할 것이고 거부하면 종헌 종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이 논란 요소가 여전한 상황에서 법

인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일선 법인들이 예상한 무리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 종회 논의 과정에서 한 중앙총회의원 스님은 법인관리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총회의원 스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번 법인법 대체입법이 솔직히 불안하다. 확산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법인 발의자인 만장 스님은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위험 소지가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종헌 논란에 휩싸인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대 종헌 개정안은 중앙총회가 총무원에 던진 숙제다. 애초 의견 수렴을 위해 단 한 번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었고, 그마저도 의견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총무원이 올린 승납 20년 이상의 비구·비구니 스님들에 동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종헌 개정안은 분명 획기적인 법안이기는 하나 대중의 공의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

고 모든 것을 종회 의결로 돌리는 것은 일종의 회피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논란이 된 종헌 만장일치 가결은 관행에 대한 적용을 어디까지 해야할 지를 되짚게 했다. ‘종헌’ 제130조2항과 3항은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총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항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로회의가 이 같은 조항을 문제삼아 종헌을 무효로 돌려도 중앙총회는 아무런 할말이 없는 상황이다. 두 번에 걸친 종헌 부결로 압박이 왔다고 해도 스스로 종헌을 어기면서 입법을 강행한 것은 무책임함을 증명한 것이다.

15대 중앙총회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남겨진 과제들을 수습해야 하는 것은 11월 이후 새로 이름을 올릴 16대 중앙총회의원과 중앙총무기관, 종도들이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총리 인선 갈등... 국민안정 최우선 해 달라”

자승 스님, 유임된 정홍원 총리에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유임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정에 최우선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6월 26일 오후 2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걸어 온 전화통화에서 “총리 인선 문제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산적한 국가현안이 많은 만큼 지금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잘못된 것을 철저히 바로 잡고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그것이 국정을 잘 이끄는 것이고 바로 국가개조가 아니겠느냐”면서 “국정 책임자

로서 지혜롭게 헌신해 달라”고 전했다. 이에 정 국무총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있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협조와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민행복과 국가개조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했다.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뒤에 뒤집어진 것은 정 총리가 헌정 사상 이 번이 처음이다.

신성민 기자

“종책 전문위원 확대로 종단 아젠다 개발·평가해야”

삼화도량 산하 삼화연구소, 제1회 종책세미나

안정적인 종책 개발과 선출을 위한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총회 종책모임 삼화도량 산하 삼화연구소(소장 법인)는 6월 24일 제1차 종책 토론회를 열고 그간의 조계종 종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요 종책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할 경우 아젠다 형성부터 결정, 집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총회에서 상시적으로 평가사업을 전개할 경우 사업추진과정과 집행과정이 보다 투명해

질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전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단의 주요 종책사업들을 분석해본 결과 총무원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적 사업개발과 추진을 어렵게 했다”며 “2000년 이후에는 종책아젠다 개발과 집행력을 갖출 수 있게 됐으나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회의원 스님들이 대부분 일선 사찰 주지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종책 개발에 오롯이 힘을 쏟기가 어려운 것도 한계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총회의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 삼화연구소는 6월 24일 첫 종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조계종의 종책 방향을 점검했다.

원 스님들이 대부분 사찰주지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 때가 아니면 종책아젠다 개발과 평가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단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교구 분권화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됐다. 김 교수는 “교구분권화는 중앙집권화된 권구조를 분

산해 교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장점이 있다”며 “광역자치에 비견할 수 있는 교구제의 개선도 주요 종책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책 토론회에서는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이 ‘34대 집행부 종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조기룡 동국대 교수와 주경 스님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변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제존 3천 4십 1번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조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